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205-244
<https://doi.org/10.29212/mh.2018..109.6>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활동

문미라*

1. 머리말
2.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한국전쟁 이전의 역할
 - 가.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 배경과 조직 과정
 - 나. 군대원호사업과 군사지식의 보급
3. 한국전쟁 시기 조국보위후원회의 활동 변화와 역할
 - 가. 전시체제의 확립과 조국보위후원회의 기능 변화
 - 나. 조국보위복권의 발행과 군비 확충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전쟁 관련 연구의 주제와 소재는 점차 다양화되어

www.kci.go.kr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왔다.¹⁾ 이 가운데 최근 들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는 한국전쟁을 직접 겪은 보통 사람들에 대한 연구다. 한국전쟁의 미시사 혹은 사회사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의 전시동원체제 속에서 삶을 영위한 다양한 역사 주체들을 발굴함으로써, 국가와 민족 중심의 거대서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개인의 전쟁 경험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주목한 주제는 주로 민간인 학살과 점령정책, 후방지역에서의 전쟁 동원, 여성과 월남민의 삶 등이다.

이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서술이 일정 정도 학문적 시민권을 획득했지만 몇 가지 한계도 있다. 먼저 연구 대상이 남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전쟁 당시 사람들의 일상을 조명한 연구,²⁾ 서울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후방지역의 치안 문제를 분석한 연구,³⁾ 남북한과 유엔의 점령정책을 다룬 연구⁴⁾ 등이 대표적이다. 구술사 연구방법론이 필수적인 민간인 학살 연구 또한 남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 주민들이 경험한 한국전쟁 연구는 여성이라는 특정 주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⁵⁾ 물론 북

1) 국내외 학계의 한국전쟁 연구 동향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그 사학사적 의미를 짚고 있는 연구로는 김태우,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 『한국사학사학보』 32, 한국사학사학회, 2015 참조.

2) 서중석 외, 『전쟁과 사람들 :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일상』, 선인, 2010.

3) 강혜경, 「한국전쟁기 후방 치안유지와 경찰」, 『인문과학연구』 30, 성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강혜경, 「한국전쟁기 서울 경찰과 후방치안」, 『인문과학연구논총』 35,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4) 기광서 외,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 선인, 2014. 이 책은 남북한 모두를 아우르고 있으나 주제의 상당 부분이 북한 지도부가 남한지역에서 펼친 점령정책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정부와 유엔의 북한지역 점령을 다룬 글은 민간인의 일상이 부각되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5) 박영자, 「6·25전쟁과 북한여성의 노동세계 : '파괴와 재생산'의 전쟁에서 '창조와 생산의 주체'였던 여성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5-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6; 조영주, 「북한 여성의 전쟁 경험과 인민되기」, 김귀옥 외,

한사의 범주에서도 북한의 전시동원체제 작동 과정에서 후방지역 주민들의 노동력 제공 및 물자 동원 실태를 분석한 연구,⁶⁾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밤낮을 바꾸어 가며 지하생활을 해야 했던 북한 주민의 일상을 그려낸 연구,⁷⁾ 중국인민지원군의 후방지원 활동과 북한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구⁸⁾ 등 관련 주제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남한 민간인이 경험한 한국전쟁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것에 비해 북한사 영역에서의 그것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북한의 조국보위후원회는 이 두 가지 결락 지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연구 주제다. 조국보위후원회는 조선인민군 원호사업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 한국전쟁 발발 약 1년 전인 1949년 7월 15일 설립되었다. 이후 이 단체는 비행기·탱크·함전기금 헌납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지식 보급과 민간 군사훈련 등을 담당하였고, 전쟁 발발 이후에도 비슷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조국보위후원회의 활동은 후방지역에서 북한 주민 일반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체험한 한국전쟁의 일면을 드러내주는 창(窓)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국보위후원회의 존재 자체는 매우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고,⁹⁾ 이후에도 여러 편의 논저에서 조국보위후원회를 부분적으로 거론해 왔다.¹⁰⁾ 이 연구들은 조국보위후원회의 결성 배경과 그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 아르케, 2013; 안태운, 「북한여성들이 겪은 한국전쟁 -전쟁동원활동과 체제하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20, 한국여성사학회, 2014; 안태운, 「전후 북한여성의 삶과 탈북의 전략적 선택」, 『여성과 역사』 24, 한국여성사학회, 2016.

6) 한성훈, 『전쟁과 인민 :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돌베개, 2012.

7) 김태우, 『폭격 :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8) 문미라, 「한국전쟁 시기 중국인민지원군·연변(延邊) 조선인 사회의 ‘후방지원’ 활동과 북중 ‘혈맹’ 관계의 강화」, 『동북아역사논총』 57, 동북아역사재단, 2017.

9) 김남식, 『남로당 연구 I』, 돌베개, 1984, 411~412쪽.

10)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 기원과 원인』, 나남출판, 1996, 777~785

성격, 설립 목적과 가입자 수, 한국전쟁 전 조국보위후원회가 주도했던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의 성과 등을 짚막하게 소개하고 있다. 조국보위후원회 사업을 강제성을 띤 회사운동과 할당식 기금 조성 사례로 지적한 연구도 있다.¹¹⁾ 조국보위복권 발행사업으로 대표되는 전쟁 기간 중 조국보위후원회의 활동을 분석한 박영자의 논문은 그간 전쟁 이전 시기에 국한해 언급되었던 조국보위후원회 관련 논의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고, 후방지역 북한 주민의 전쟁 동원 실태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¹²⁾

이상의 연구들로 조국보위후원회의 존재와 역할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북한의 공식 간행물에 크게 의존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국보위후원회가 결성 한 달 정도 만에 269만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초대형 대중조직으로 발전하였다는 북한의 서술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고, 결성 배경·과정이 매우 간단하게 처리되었다. 둘째, 박영자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국보위후원회의 전쟁 이전 모습에만 주목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 수

쪽;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I : 건당·건국·건군의 역사』, 선인, 2003, 590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 1945~1961』, 선인, 2005, 273~274쪽; 김용현, 「로동신문 분석을 통한 북한정치 변화 연구 : 1945~1950」, 『북한연구학회보』 7-1, 북한연구학회, 2003, 122~123쪽; 황성철, 『北韓軍의 韓國戰爭遂行 戰略에 關한 研究 : 클라우제비츠의 摩擦理論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163~165쪽; 김광수, 「북한정권 성립 이후 '통일' 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1948년 9월부터 1950년 1월까지를 중심으로-」, 『군사』 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21~22쪽.

11) 김재웅a, 「북한의 민간자원 동원정책과 일상적 동원체제의 형성(1945~1953)」, 『한국사연구』 175, 한국사연구회, 2016, 251~254쪽.

12) 박영자, 「6·25전쟁기 북한의 '후방' 정책 -후방 전시동원에 대한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5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하지만 조국보위후원회 자체를 시야의 중심에 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 이전의 설립 과정과 역할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조국보위복권 발행사업도 매우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행을 위해 만들어진 이 단체가 정작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거의 드러난 바 없고, 전쟁 이후의 해체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전쟁 이전의 활동 역시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어, 이외에는 이 단체가 무슨 역할을 담당했는지 베일에 쌓여있다.

요컨대 기존의 모든 논저에서 조국보위후원회는 하나의 사례나 부차적인 소재로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조국보위후원회 결성부터 해체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북한관계사료집』에 수록된 인제군 문서, 미군 노획문서 중 조국보위후원회 초급단체 회의록 및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기관지 『조국보위를 위하여』, 『로동신문』 등을 활용하여, 조국보위후원회의 결성 배경과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전쟁 발발 전후 조국보위후원회가 어떠한 활동을 전개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쟁 이전 북한의 전시동원체제 확립 양상과 그 성격, 전쟁 이후 보통 사람들이 경험한 ‘일상으로서의 한국전쟁’의 단면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2.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한국전쟁 이전의 역할

가.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 배경과 조직 과정

조국보위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1949년부터 시작된 군사적 성격의 38선 충돌 및 북한의 전쟁 준비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49년 초부터 시작된 남한의 공세적 38선 압박과 이승만의 호전적인 ‘실지(失地)회복론’은 북한 지도부에게 무장 강화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동시에, 평화공세를 벌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했다.¹³⁾ 이후 북한은 평화적 통일과 안정을 바라는 반면 남한은 무력에 의한 도발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북한 당국의 선전이 대대적으로 행해졌다.

5월이 되자 38선 부근에서는 연대급 규모의 전투가 발발하기 시작했다. 연대급 전투가 처음으로 발화한 것은 5월 4일 개성 송악산전투였다.¹⁴⁾ 뒤이어 6월 28일 시작된 호림부대(虎林部隊)의 집요한 북한 침투와 8월 6~20일간 이어진 강원도 인제군 남면전투(南面戰鬪)는 남북이 1949년에 이미 전시상태에 돌입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후였다.¹⁵⁾ 특히 호림부대의 침투와 북한지역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학살·방화·약탈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쟁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하였다. 1949년 11월 3일 열린 조국보위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종업원 쫓기대회에서, 조국보위후원회의 필요성 중 하나로 “호림부대의 죄악과 38선 무장충돌”을 거론한 것은 이 같은 사회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¹⁶⁾

이렇게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진짜’ 전쟁에 대비한 동원체제 확립이 절실했다. 민간인을 동원하고 군대와 사회의 접점을 형성함으로써 ‘전 사회의 군사화’를 달성하고,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동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던 것이다. 이는 기존에 조직되어 있던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 북조선민주녀성

13)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258~269·290~291쪽.

14) 위의 책, 273~276쪽.

15) 김재웅b, 「북한의 38선 접경지역 정책과 접경사회의 형성 -1948~1949년 강원도 인제군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8, 고려사학회, 2007, 174쪽. 이 논문의 138~140쪽에는 남면전투의 내용과 이로 인한 인제군 주민들의 동원 실태가 상세히 논의되고 있다. 호림부대의 설립 취지와 창설 경위, 주요 활동 등은 정병준, 앞의 책, 370~375쪽; 김재웅c, 「38선 분쟁과 접경지역 위기에 대처한 북한의 민간인 동원정책」, 『한국학논총』 4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264~266쪽 참조.

16) 「조국보위를 위한 조선중앙통신사 종업원 쫓기대회 보고서」(1949.11.3),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마이크로필름 자료.

동맹(이하 녀맹) 등의 사회단체와는 달리, 전쟁 준비에 ‘특화’된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등장한 것이 전 사회적 대중동원단체인 조국보위후원회였다. 조국보위후원회의 탄생은 전쟁으로 가는 북한 사회의 단면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 같은 배경 아래에서 1949년 7월 15일 민청, 녀맹, 북조선 농민동맹(이하 농맹), 북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맹) 등 사회단체들의 공동 발기로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는 조직의 강령규약 초안을 채택하고 하급단체의 조직 준비에 따르는 제반 사업에 착수하였다.¹⁷⁾ 이어서 각 지역별 준비위원회가 잇달아 결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에서는 7월 17일, 평안남도·황해도·함경남북도에서는 19일, 자강도에서는 21일에 각각 결성준비위원회가 조직을 완료하고 시·군·리의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¹⁸⁾ 평양시에서도 23일 각 사회단체 대표 11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국보위후원회 평양시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¹⁹⁾

이리하여 각 지역·단위별로 조국보위후원회가 조직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에서 출판된 논저들은 공통적으로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 발족 한 달여 만인 1949년 8월 말에 농촌의 마을 단위까지 지부 조직을 완료하여, 2만 5천여 개의 초급단체와 269만 1천여 명의 회원을 망라하였다고 서술

17)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 조직”, 『로동신문』, 1949년 7월 17일, 1면.

18) “조국보위후원회 각도 결성준비위원회 조직”, 『로동신문』, 1949년 7월 24일, 1면.

19) “조국보위후원회 평양시준비위원회”, 『로동신문』, 1949년 7월 23일, 1면. 평양시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평양시 민청위원장 리석한, 부위원장으로는 직맹 평안남도 평의회 서기장 김해식이 각각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 구성원 및 지도부의 면면으로 보아, 조국보위후원회의 발족에는 북한에서 이미 조직된 사회단체들이 매우 큰 역할을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하고 있고,²⁰⁾ 선행연구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²¹⁾ 1949년 공민등록에 의해 집계된 당시 북한의 인구는 962만여 명이었으므로,²²⁾ 269만 1천여 명은 전체 인구의 28%에 해당하는 수치다. 조국보위후원회는 16세 이상부터 회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²³⁾ 16세 미만 인구를 제외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이는 과연 사실일까? 특히 면·리 단위에서의 조직 상황은 어땠을까? 기존 연구는 이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의 선전과 달리 지방 단위에서의 조국보위후원회 조직은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았다.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1949년 9월 13일 현재 농촌 29개 리 중 27개 리, 학교 6곳 중 2곳, 사무직장 25개소 중 8개소 등 모두 51% 밖에 결성되지 못했으며, 회원 역시 전 대상자의 50%만이 가입을 완료한 상태였다.²⁴⁾ 인제군 남면당에서는 조국보위후원회가 설립된 지 3개월 가까이가 지난 10월에도 이 사업의 의미를 “전체 인민들에게 옳게 인식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반성하거나, 당 간부들이 조국보위후원회에 “이제껏 관심이 없었다”고 자백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²⁵⁾ 리 단위에서는 더욱 심각하여, 10월 말 현재 인제군 남면 두 무리의 조국보위후원회 가입률은 31%, 신월리는 21%에 불과

2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24,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280~286쪽; 최옥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 시기 조국보위후원회의 결성과 그 활동」, 『력사과학』 216,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5쪽.

21) 대표적으로 서동만, 앞의 책, 274쪽; 김용현, 앞의 논문, 122쪽.

22) 김두섭 외, 『북한의 인구와 인구 센서스』, 통계청, 2011, 18쪽.

23) 최옥향, 앞의 논문, 5쪽.

24)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61호」(1949.9.13), 『북한관계사료집』 3, 국사편찬위원회, 1985, 593~594쪽. 이하에서 『북한관계사료집』을 인용할 때는 『사료집』으로 약칭하고, 발행처와 발행연도를 생략하였다.

25)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남면당 열성자대회 회의록」(1949.10.10), 『사료집』 4, 570~571쪽.

했다.²⁶⁾

해를 넘긴 1950년 3월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국보위후원회 인제군본부는 그 시점까지 가입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성이 완료되었지만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예컨대 인제군 북면 원통리와 북리 초급단체는 당시까지 단 한 번의 총회도 개최하지 못했고, 서화면 이포리와 서희리에서는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에 한 명도 참가하지 않고 있었다.²⁷⁾ 심지어 전쟁 발발 이후에도 회원 확대사업이 계속되었으나 여전히 잘 진행되지 않는 지역이 적지 않았다. 북한 지도부는 조국보위후원회 당조 및 초급단체 검열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다.²⁸⁾

갑작스럽게 거의 대부분의 민간인을 포괄하는 단체를 조직해야 했던 지방 간부들은 실제 회원 가입을 독려하기보다는 명부에 이름만 등록해놓는 등 면피용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급급했다.²⁹⁾ 그렇지 않아도 지방 간부가 충분치 않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던 이들에게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개선에 나선 것이 아니라, 사업 부실의 책임을 간부 개인의 결함 탓으로 돌렸다. 지역 민청위원장인 조국보위후원회 간부로 선발되어, 민청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간부들이 조국의 정치정세를 옳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해버린 것이 대표적이었다.³⁰⁾ 이 과정에서 조국보위후원회 사업 태만을 이유로 징계를

26)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68호」(1949.10.29), 『사료집』 3, 764쪽.

27)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결정서 상제85호」(1950.3.16), 『사료집』 15, 208~209쪽.

28) 「인제군당 7·8월분 사업계획서」(1950), 『사료집』 15, 356·360쪽.

29)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61호」(1949.9.13), 『사료집』 3, 594~595쪽.

30)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민청당조 제50차 회의록」(1949.12.20), 『사료집』 4, 166쪽.

받는 지방 간부들이 속출했다.³¹⁾

북한 주민들이 조국보위후원회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이미 너무 많은 사회단체가 설립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이 막대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연령·성별·직업에 따라 민청·녀맹·직맹·농맹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고, 복수의 사회단체에 가입한 성인 1인이 매달 네다섯 번의 맹비를 납부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었다. 농업에 종사한 당원과 사회단체 맹원들이 매달 부담해야 했던 당비와 맹비는 각각 10원에 달했다.³²⁾ 조국보위후원회 회비는 20세 이하 2원, 21~25세 5원, 25세 이상 10원, 학생이나 가정주부 1원이었고, 입회비만 5원에 달했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³³⁾ 이 때문에 인제군에서는 1949년 10월 31일 현재 입회비 51%, 3·4분기 회비 33%, 4·4분기 회비의 28% 밖에 납부되지 않았고, 전체 회원들에게 입회비 및 회비에 대한 의의를 널리 선전하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12월 15일 이전에 납부를 완료할 것을 독려했다.³⁴⁾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사회단체를 매개로 한 각종 노동력 동원도 조국보위후원회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다종다기한 사업에 동원되느라 적지 않은 시간을 빼앗겼을 북한 주민들에게 또 다른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생업에 종사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과중한 동원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31)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결정서 상제85호」(1950.3.16), 『사료집』 15, 211~212쪽.

32) 김재웅a, 앞의 논문, 252쪽.

33) 「조국보위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초급단체 회의록」(1949.10.5), 통일부 북한자료 센터 소장 마이크로필름 자료, 12쪽. 1950년경 북한의 물가는 담배 한 갑 20원, 옥수수 하나 10원, 계란 하나 20원, 한 끼 밥값 50~80원이었다(김재웅d, 「한 공산주의자의 기록을 통해 본 한국전쟁 발발 전후의 북한」, 『한국사연구』 141, 한국사연구회, 2008, 285쪽).

34)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70호」(1949.11.27), 『사료집』 3, 849~850쪽.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³⁵⁾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북한 지도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을 강행했다. 이는 조국보위후원회를 통해 기존 사회단체에서는 하지 않았던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음을 뜻할 것이다. 조국보위후원회가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나. 군대원호사업과 군사지식의 보급

조국보위후원회는 조선인민군 강화와 조선인민군에 대한 대중적·조직적 원호사업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였다.³⁶⁾ 이를 위해 조국보위후원회에서는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 군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을 전 사회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과 군사지식의 보급 또한 조국보위후원회의 주요 임무 중 하나였다. 이 절에서는 이 가운데 조국보위후원회가 가장 주력했던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과 군사지식의 보급을 중심으로 이 단체의 역할을 알아보자.

35) 김재웅c, 앞의 논문, 277쪽.

36) 조국보위후원회의 구체적인 과업은 강령(초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길지만 그 대로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보위하는 조선인민군대의 강화사업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며 국토보위사업에 적극 협조 참가한다.
- ② 조국보위를 위하여 군사지식을 습득하며 인민군대에 복무함을 고상한 영예로 한다.
- ③ 조선인민군대의 강화를 위하여 과학지식과 발명으로 공헌하며 항공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④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강발전을 저해하려는 온갖 반동분자들의 파괴음모로부터 직장 및 농촌과 국가재산을 방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국보위후원회 강령(초안)』, 『조국보위를 위하여』 창간호(1949.10), NARA, RG242, SA 2009 I, Box 1, Item 85. 『조국보위를 위하여』는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기관지다. 월간으로 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확인되는 것은 1949년 10월에 발행된 창간호, 1950년 신년호, 1950년 5월호, 1951년 4월호 등 총 네 호분으로 미군 노획문서 중 하나다. 이하에서 『조국보위를 위하여』를 인용할 때는 노획문서 번호를 생략하였다.

조국보위후원회가 창설 초기부터 전쟁 발발 이후까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인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은 1949년 10월 12일 시작되었다.³⁷⁾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가 이전까지 ‘조국보위후원회 사업 기금 회사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아진 금액을 더욱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비행기와 탱크를 구입하여 조선인민군에 헌납하기로 결정한 것이 계기였다. 한 달여 후인 11월 19일에는 함흥시 상인·기업가들이 “조국의 3면에 바다를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에 비추어, 해상경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천 50만 원의 거액을 회사하였다.³⁸⁾ 이에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는 비행기·탱크와 함께 함선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금도 조선인민군에 헌납하기로 결정하였다.

『로동신문』은 연일 대대적으로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을 보도하였고, 조국보위후원회도 자신의 기관지에 기금 회사자들의 사진과 회사액을 싣는 등 운동 참여를 독려했다.³⁹⁾ 노동자들은 일요일을 이용해 ‘애국노동’을 하거나 시간 외 노동을 하여 생긴 수입을 헌납했고, 농민들은 ‘여유미’를 내어놓는 것으로 이 운동에 참가했다. 1950년 1월 현재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으로 모금된 금액은 3억여만 원이었고, 이와 별개로 5만여 가마니의 애국미도 모아졌다.⁴⁰⁾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37)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에서 조국보위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성 : 인민군대에 비행기와 탱크를 헌납”, 『로동신문』, 1949년 10월 13일, 3면.

38) “함선도 헌납기로 결정 :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에서”, 『로동신문』, 1949년 11월 23일, 1면.

39) 「비행기 땅끄 함선 헌납기금 회사자들」, 『조국보위를 위하여』, 1950년 신년호(1950.1), 91쪽.

40) 김일수, 「조국보위후원사업과 군무자 가족 원호사업의 강화는 조선인민군의 무장력을 부단히 장성, 강화시킨다」, 『인민』, 1950년 2월호(『사료집』 39, 740쪽). 하지만 이 모금액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또 다른 글에서는 1949년 말까지 모금된 금액이 1억 2,000여만 원이라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김강,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의 절대한 지지와 원호 속에서 장성 강화되고 있다」, 『근로자』 제2호(1950.1.31)(『사료집』 53, 323쪽).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그간 모인 금액의 두 배에 가까이가 모금될 리 없었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들도 기금을 희사하였고, 사할린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조국보위후원회 함경북도본부에 적지 않은 금액을 보내왔다.⁴¹⁾

1950년 1월 25일에는 그간 모금한 비행기·탱크·합선기금을 조선인민군에 전달하는 ‘헌납식’이 거행되었다. 부수상 박헌영·홍명희, 최고인민회의 의장 허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허가이 등 정부·당의 주요 인물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 행사에서는, 조국보위후원회 부위원장 문종목이 조선인민군을 대표한 민족보위상 최용건에게 1억 원의 비행기·탱크·합선기금을 전달하였다.⁴²⁾ 최용건은 기금 헌납에 대한 감사 인사에서 이 운동을 통해 조선인민군이 현대적 무기와 선진 군사기술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운동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⁴³⁾

비행기·탱크·합선기금 헌납운동은 전쟁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2일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는 지난 해 모금해둔 기금 중 일부인 1억 7천만 원과 양곡 746톤을 정부에 헌납하면서, 비행기·탱크·합선기금 헌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⁴⁴⁾ 실제로 같은 달 평양제14인민학교 소년단원들은 ‘소년호’를 전선에 보내기 위한 기금 모금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였고, 8월에는 김일성대학 교직원들이 ‘대학호’ 기금 마련을 호소하며 켈기대회를 여는 등 전쟁 이전과 다

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둘 중 하나는 과장된 숫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로는 모금액이 실제 얼마나 되었는지, 북한에서 제시한 수치가 믿을 만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자료발굴을 통해 재검토하고자 한다.

- 41) 립해, 「조국보위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인민군대를 위한 원호사업의 의의」, 『근로자』 제2호(1950.1.31)(『사료집』 53, 351쪽).
- 42) “인민군대에 바치는 비행기 탱크 합선기금 1억 원 헌납 : 25일 저녁 헌납식 성대히 거행”, 『로동신문』, 1950년 1월 27일, 1면.
- 43) “비행기 탱크 합선기금 헌납에 대한 최용건 민족보위상의 답사”, 『로동신문』, 1950년 1월 27일, 1면.
- 44)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비행기 탱크 합선 기금 제2차 헌납”, 『로동신문』, 1950년 7월 12일, 1면.

름없는 모습이 지속되었다.⁴⁵⁾

북한은 이 운동이 북한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 그러했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 이미 한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자발적 ‘회사’를 강조한 조국보위후원회 사업은 할당식으로 대중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노동자·사무원들의 봉급에서 후원금을 공제하는 식으로 추진되었다.⁴⁶⁾ 당국에서는 할당식과 공제방식의 헌납운동을 철저히 시정하고 자의에 의한 헌납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했지만,⁴⁷⁾ 적지 않은 주민들은 비행기·탱크·함전기금 헌납운동을 ‘착취’로 인식하였다.⁴⁸⁾ 이것이 식민지시기 ‘국방헌금’과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 조국보위후원회 초급단체 간부의 목소리⁴⁹⁾ 역시 역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즉, 비행기·탱크·함전기금 헌납운동을 식민지시기 ‘국방헌금’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러한 언술이 등장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조국보위후원회는 군사지식의 보급에도 앞장섰다. 기관지 『조국보위를 위하여』는 매호마다 적지 않은 분량의 ‘군사과학지식’, ‘군사과학기술’이라는 고정 꼭지를 두고 있었다. 여기에서 다루는 군사지식은 제식훈련법에서부터 각종 무기나 비행기·탱크·함선의 구조, 항공 및 항해술, 실제 전투에서의 방위 판정법, 로켓의 이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광범위한 것이었다. 해당 기사들은 매우 쉽고

45) “『소년호』 비행기 땅크 전선에 보내자! : 평양제14인민학교 소년단원들의 호소”, 『로동신문』, 1950년 7월 16일, 2면 ; “『대학호』 군기헌납을 호소 : 김일성대학교 교직원들 꺾기”, 『로동신문』, 1950년 8월 6일, 1면.

46) 김재웅a, 앞의 논문, 253쪽.

47)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70호」(1949.11.27), 『사료집』 3, 851쪽.

48) 「평남안단 정산보 제73호」(1950.9.1), 『사료집』 18, 478쪽.

49) 「조국보위를 위한 조선중앙통신사 종업원 꺾기대회 회의록」(날짜 미상),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마이크로필름 자료.

자세한 설명에 덧붙여 그림과 사진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관련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⁵⁰⁾

군사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조국보위후원회의 노력은 지역·직장 단위에 군사지식 연구반을 설치하는 것으로도 표현되었다. 조국보위후원회에 가입한 청년 회원들은 항공, 포, 탱크, 해양, 자동차 등 각종 군사지식 연구반에서 자신의 관심과 소질, 능력에 따라 군사지식을 습득하였다.⁵¹⁾ 일례로 조선중앙통신사 초급단체에는 기술연구반, 글라이더 연구반, 모형기 연구반이 만들어졌고,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하여 발명과 창의고안에 힘쓰으로써 군사과학 제고에 노력하는 것이 회원들의 의무로 규정되었다.⁵²⁾ 인제군에서도 “38선의 환경을 고려”한 군사과학기술 연구반 조직을 서둘렀다.⁵³⁾ 조국보위후원회는 이 연구반들을 지도하는 기술연구지도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의를 개설하여 연구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다.⁵⁴⁾

북한 주민들이 잡지와 연구반 학습으로 배운 군사지식을 활용하고 실전에 필요한 군사기술을 몸소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도 조국보위후원회에 맡겨졌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이 그것이다. 연구반 조직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직장별로 조국보위후원회 산하에 훈련대가 꾸려졌다. 훈련대는 16세 이상 30세 이하의 청년들을 기본 대오로 하여 편성되었고,⁵⁵⁾ 이미 만

50) 『조국보위를 위하여』 각 호의 해당 기사 참고.

51) 「[사설] 군사기술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조국보위를 위하여』 제2권 제5호(1950.5), 1쪽.

52) 「조국보위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초급단체 제2차 총회 회의록」(1949.10.5),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마이크로필름 자료.

53)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61호」(1949.9.13), 『사료집』 3, 595쪽.

54) 「[사설] 군사기술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조국보위를 위하여』 제2권 제5호(1950.5), 2쪽.

55)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61호」(1949.9.13), 『사료집』 3, 595쪽.

들어져 있던 민청 훈련반은 조국보위후원회 훈련대로 흡수되었다.⁵⁶⁾ 조국보위후원회가 실시하는 민간훈련에는 여성 자위대 대원들도 모두 참가해야 했다.⁵⁷⁾ 직장에서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사격연습 등의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⁵⁸⁾

조국보위후원회의 군사훈련은 철저한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다. 군사훈련 책임자들은 ‘군사훈련 간부회’에 참가하여 참모장 및 군사훈련지도원 강습을 받은 후, 각 면리에 직접 내려가 청년훈련대 조직에 착수하였다. 군 단위 간부들에 대한 훈련은 중앙본부에서 하달한 과정표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이 끝나면 이들이 강사가 되어 면 단위 군사훈련 책임자들에게 또 다시 강습을 하는 방식이었다.⁵⁹⁾ 각 면과 부락에 이르기까지 소대장 이하의 간부들은 모두 세포의 핵심 당원으로 배치시킬 것이 규정되었다.⁶⁰⁾

이처럼 나뉠대로 짜임새 있는 훈련계획을 통해 전 민간인의 군사화를 꾀했던 조국보위후원회의 의도와 달리, 민간에서는 군사훈련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하나의 노동력 동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주민들로서는 각종 훈련

56)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58호」(1949.8.25), 『사료집』 3, 527쪽. 이 자료에서 38선 접경지역에 존재했던 38자위대 훈련사업도 조국보위후원회 관할이 되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57)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 여성동맹 당조 제28차 회의록」(1949.9.22), 『사료집』 4, 258쪽.

58) 리석청, 「조국보위후원사업을 위하여」(1950.1.18), NARA, RG242, SA 2012, Box 1143. 이 글은 평양화학공장 문학서클에 소속된 저자가 쓴 소설로 보인다. 소설이기는 하지만 직장 내 조국보위후원회 사업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당대에 쓰인 것이기 때문에 사료로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글에 따르면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실시한 군사훈련의 시간은 40분 정도였고, 작업복 차림 그대로에 목총을 메고 사격연습을 실시하였다.

59)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70호」(1949.11.27), 『사료집』 3, 845-846쪽.

60)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61호」(1949.9.13), 『사료집』 3, 595쪽.

은 시간을 빼앗기는 귀찮은 일일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이미 너무 많은 사업에 동원되고 있었다.⁶¹⁾ 게다가 당국은 조국보위후원회가 주관하는 훈련에 소요되는 기금마저 민간에 전가하였다.⁶²⁾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와 같은 동원을 직접 겨냥하여 불만을 입에 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남녀칠세부동석’을 말하면서 남녀가 밤낮으로 같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조국보위후원회의 군사훈련을 비판하는 등 소극적인 저항에 나서기도 하였다.⁶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국보위후원회가 전개한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인적·물적 동원을 기반으로 하였다. 다소 과장하자면, 조국보위후원회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씨앗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남한정부를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의 주범으로 지목하였다.⁶⁴⁾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레토릭과 그에 의해 구축된 동원체제는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더욱 폭발력을 가지게 되었다.

61) 38선 접경지역인 인제군에서 군사훈련 참가율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38연선 사업에 해당 인원들이 동원된” 것을 꼽은 것은 이러한 맥락이었다.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70호」(1949.11.27), 『사료집』 3, 846쪽.

62)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58호」(1949.8.25), 『사료집』 3, 527쪽 ;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 여성동맹 당조 제28차 회의록」(1949.9.22), 『사료집』 4, 258쪽.

63)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73호」(1949.12.27), 『사료집』 3, 926-927쪽.

64) 김재웅b, 앞의 논문, 151쪽.

3. 한국전쟁 시기 조국보위후원회의 활동 변화와 역할

가. 전시체제의 확립과 조국보위후원회의 기능 변화

전쟁 발발 이튿날인 1950년 6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정령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를 발표하고, 국내의 모든 주권을 군사위원회에 집중한다고 선포하였다.⁶⁵⁾ 이어 북한은 6월 27일자로 「전시상태에 관하여」를 선포하고, 7월 1일에는 군사위원회 명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 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관하여」를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인 전시총동원체제로 전환하였다.⁶⁶⁾ 전쟁 이전부터 작동하고 있었던 동원체제 덕분에 북한은 단기간 안에 비교적 완벽한 동원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이후에는 전시동원체제를 뒷받침할 각종 결정과 지시가 연달아 발표되었다. 노동력 동원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우선 7월 6일 공포된 군사위원회 결정 제6호 「전시로동에 관하여」는 직장 노동자와 사무원의 자의적 이탈, 무단 전근 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엄격한 노동규율 준수를 보장하였다.⁶⁷⁾

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 :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 『조선중앙년감 1951~1952』,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52, 82쪽. 군사위원회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헌영, 홍명희, 김책, 최용건, 박일우, 정준택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 : 전시상태에 관하여」, 『조선중앙년감 1951~1952』, 82~83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 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관하여」, 『조선중앙년감 1951~1952』, 83쪽.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전시체제 및 전시상태 선포의 의미와 국가기관 개편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윤경섭, 「한국전쟁기 북한의 전시체제와 계엄」, 『인문과학』 62,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윤경섭, 「북한·소련의 전시체제 형성 과정 비교 연구 -초기 '전시상태'와 국가기관 개편을 중심으로-」, 『사람』 61, 수선사학회, 2017 참조.

67) 한성훈, 앞의 책, 80쪽.

후방 노동력을 동원할 목적으로 7월 26일 발표된 군사위원회 결정 제23호 「전시의무노력 동원에 관하여」는 파괴된 도시와 농촌을 급속히 복구하고 전선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8세 이상 55세 이하 남자들의 거주·이동의 자유를 금지하고, 군수물자의 생산 및 복구사업을 위한 의무 노동력 동원을 형사규범으로 강제하였다.⁶⁸⁾

주민들의 노동력과 물자를 동원하는 것에 관계된 세부적인 사항들은 면인민위원회 단위에서 결정·추진하였다. 인민위원회는 비행기와 탱크 헌납기금으로 현금과 벼·조·옥수수를 비롯해 발동기 등 사소한 물품까지 헌납받았다.⁶⁹⁾ 전쟁 이전 조국보위후원회가 담당했던 역할의 일부가 인민위원회라는 정권기관으로 옮겨간 것이다. 당단체도 후방의 공고화와 이를 위한 주민 동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⁷⁰⁾

뿐만 아니라 조국보위후원회 활동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던 군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의 주체도 인민위원회, 당단체, 민청, 녀맹 등으로 다양해졌다.⁷¹⁾ 심지어 조선인민군과 그 가족 원호사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로동신문』의 사설에 조국보위후원회라는 명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⁷²⁾ 전쟁 이후 군무자와 후방가족 원호사업은 지방 인민위원회 또는 당열성자들이 핵심이 되어 농맹, 민청, 녀맹 등의 사회단체를 동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⁷³⁾ 전시상태가 정식으로 선포되자, 조국보위후원회 뿐 아니

68) 정일영, 『북한의 사회통제체제 형성, 1945~1961 : 규범·동의·재사회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102쪽.

69) 한성훈, 앞의 책, 84쪽.

70) “후방의 공고화를 위한 제반 대책을 토의 : 평양시당 열성자회의”, 『로동신문』, 1950년 7월 27일, 2면.

71) “군무자 가족들을 성심으로 원호”, 『로동신문』, 1950년 7월 25일, 2면.

72) “[사설] 인민군대와 그들의 가족 원호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로동신문』, 1950년 8월 4일, 1면.

73) “사회단체를 발동시켜 후방가족의 영농 협조”, 『로동신문』, 1950년 8월 12일,

라 모든 사회단체들과 당·정권기관이 동원체제에 적극적으로 결합했던 것이다.

조국보위후원회는 달라진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역할을 재조정해 나갔다. 특히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했던 시기에 분산·파괴되었던 훈련대를 재정비하는 사업, 다시 말해 민간인을 재조직해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⁷⁴⁾ 조국보위후원회는 훈련대를 대상으로 보총과 수류탄 등 각종 보병무기 사용법과 투탄(投彈)훈련을 진행하였고, 조선인민군의 전투 경험을 기본으로 하여 정찰·공격·방어전에 요구되는 각종 전술지식을 가르치는 광범위한 전투훈련을 실시하였다.⁷⁵⁾ 더불어 수십 개의 야영훈련소를 설치하고 이곳에 많은 청년들을 망라하여 군사훈련을 전개하였다.⁷⁶⁾ 군사훈련을 받은 주민들은 후방의 군사적 역량을 공고화하는 역할과 함께, 조선인민군 후비대로서의 임무도 부여받았다.

조국보위후원회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군사간부들의 세미나를 조직하는 등 훈련지도원 및 그 초급지도자들의 배치·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전쟁에서 전투 경험을 쌓은 ‘영예군인’⁷⁷⁾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천 명의 조국보위후원회 간부들을 조선인민군 신설부대에 파견하여 군대의 전투력 증강에 공헌하였다.⁷⁸⁾ 이것은 전쟁 이전

2면; “정성과 로력을 바쳐 군무자 가족을 원호 : 고원군 군내면 하석연리 농민들”, 『로동신문』, 1950년 8월 22일, 2면; “근로단체를 발동시켜 전선원호사업을 강화”, 『로동신문』, 1951년 2월 19일, 2면.

74) 최동욱(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군사훈련부 부장), 「제1계단 훈련강령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훈련지도원들의 역할」, 『조국보위를 위하여』(1951.4), 4쪽.

75) 정렵(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민대중 속에서의 군사훈련사업”, 『로동신문』, 1952년 11월 30일, 2면.

76) 정렵(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국보위는 조선인민의 신성한 최대 의무이다”, 『로동신문』, 1952년 7월 15일, 2면.

77) 북한에서 ‘영예군인’이란 전쟁에서 부상당해 제대한 군인들을 의미한다.

78) 안영, “조국보위후원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로동신문』, 1953년 7월 15일, 2면.

부터 조국보위후원회의 군·면·리 단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군사 훈련 간부회’라는 이름의 체계적인 훈련이 실시되었고, 전쟁 발발 이후에도 훈련대사업 강화를 명목으로 한 각종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전쟁기에 들어서 강화된 조국보위후원회의 군사적 기능은 자위대 개편·지도사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⁷⁹⁾ 북한은 전쟁 이전부터 민간방위조직인 자위대를 양성·확대하여 군사적 위기를 극복하고 방위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⁸⁰⁾ 다만 전쟁 이전 자위대사업이 38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전쟁 발발과 동시에 북한의 모든 후방에서 자위대가 창설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자위대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키면서 조선인민군이나 중국인민지원군의 작전에 협조하여 함께 전투에 투입되었고,⁸¹⁾ 마을에 침투한 유엔군이나 국군 ‘간첩’을 체포하기도 하였다.⁸²⁾

조국보위후원회는 자위대 책임자들의 활동 경험을 총화하여 경험교환회 혹은 보다 넓은 범위의 활동경험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위대 책임자들의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자위대의 훈련과 실제 전투를 직접 지도하였다. 자위대원을 대상으로 한 조국보위후원회 훈련에서 강조된 것은 경찰훈련과 ‘간첩’과의 투쟁이었다. 수류탄과 총기 사격, 야간 및 공중사격의

79) “조국보위후원회 제2차 중앙위원회”, 『로동신문』, 1951년 11월 22일, 1면.

80) 김재웅c, 앞의 논문, 269~275쪽.

81) “보총 집중사격으로 비26 1기를 격추 : 정평면 무장자위대원들”, 『로동신문』, 1951년 8월 6일, 3면; “영광스러운 용사 : 무장자위대원 김기문 동무”, 『로동신문』, 1951년 10월 5일, 3면;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 : 인민무장자위대 리일호 동무” 『로동신문』, 1953년 2월 11일, 3면 등.

82) “고도의 경각성으로 간첩들을 일망타진 : 강원도 내 각지 자위대원들”, 『로동신문』, 1951년 11월 4일, 3면; “함북도 인민자위대원들 잠입한 간첩을 속속 체포”, 『로동신문』, 1952년 12월 12일, 7면; “전 인민적 반간첩 투쟁 : 교묘하게 가장하고 잠입한 간첩을 체포한 자위대원들”, 『로동신문』, 1953년 2월 22일, 3면 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훈련들도 덧붙여졌다.⁸³⁾ 북한지역에서는 무엇보다 미군의 공중폭격에 의한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에,⁸⁴⁾ 조국보위후원회는 ‘비행기 사냥꾼조’ 조직과 이들에 대한 훈련을 강조하였다.⁸⁵⁾

이밖에도 조국보위후원회는 위생훈련사업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하였다. 주지하듯이 전쟁에서는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므로 의료인력을 가능한 한 빨리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학제가 단축되고 단기양성소가 설치되는 등 평시에는 볼 수 없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북한에서도 보건성과 조선적십자회의 주도 아래 보건간부 양성사업을 대규모로 전개하고,⁸⁶⁾ 각지에 단기 간호원양성소를 설치하여 간호원·조산원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데 주력하였다.⁸⁷⁾ 이 과정에서 조국보위후원회는 조선적십자회와 연계하여 4만 3천여 명의 여성들을 위생초소원 양성을 위한 종합단기강습에 망라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⁸⁸⁾ 강습을 마친 여성들은 각 지역 위생초소에 배치되어 감염병 환자들의 조기 적발 및 격리, 소독과 청소 등의 임무를 맡았다.⁸⁹⁾

83) 정립(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민대중 속에서의 군사훈련사업”, 『로동신문』, 1952년 11월 30일, 2면.

84)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에 관해서는 김태우, 앞의 책 참조.

85) ‘비행기 사냥꾼조’는 김일성이 직접 설치를 지시한 조직이다. 김일성은 1950년 12월 29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238호’를 통하여, 각 보병연대당 2~3개조의 ‘비행기 사냥꾼조’를 조직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들에게는 화력진지구 축법, 신호설정법, 적 및 아군 비행기 식별법, 조준연습법, 각종 비행기에 대한 사격방법 등 전문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봉급의 50%가 가산되고 식사의 질을 높여주는 등 특혜가 부여되었다. 김일성은 각 사단장들이 ‘비행기 사냥꾼조’의 사업결과를 매달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할 정도로 이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김일성, 「비행기사냥꾼조를 조직할 데 대하여」(1950.12.29), 『김일성 저작집』 6,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33~234쪽.

86) “보건간부 양성사업 대규모로 전개”, 『로동신문』, 1951년 3월 12일, 1면.

8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1~1952』,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52, 456쪽.

88) 정립(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국보위는 조선인민의 신성한 최대의 무이다”, 『로동신문』, 1952년 7월 15일, 2면.

89) “방역에 헌신 분투 : 연호면 내 위생초소들”, 『로동신문』, 1951년 8월 30일, 3면.

이와 같이 개전으로 인해 달라진 동원시스템 속에서, 조국보위후원회는 자신의 역할 일부를 정권기관·당이나 다른 사회단체에 넘기는 한편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였다. 정전을 눈앞에 둔 1953년 7월 시점에도 조국보위후원회는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군사스포츠사업’의 보급과 확대가 그것이었다. 군사스포츠란 사격, 항공, 자동차, 모터사이클, 행군, 장애물 극복, 수영, 스키 등을 의미했다. 조국보위후원회는 대중 속에 군사스포츠를 확산한다면, 청년들을 육체적으로 단련하면서 그들에게 조직성·규율성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⁹⁰⁾ 전쟁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조국보위후원회는 실제 전쟁이 발발하자 이처럼 정세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자신들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전쟁 수요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조국보위복권의 발행도 이 가운데 하나였다.

나. 조국보위복권의 발행과 군비 확충

조국보위후원회가 한국전쟁 발발 이후 무엇보다 주력했던 사업은 조국보위복권 발행·판매였다. 북한은 1951년 6월 14일 내각 수상 김일성과 재정상 최창익의 명의로 내각결정 제297호 「조국보위복권 발행에 관하여」를 발표하였다. 조국보위복권 발행은 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가 비행기·탱크·함선 헌납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복권을 발행할 것을 내각에 제의하여 성사되었다. 복권은 제1회는 7월 중에, 제2회는 10월 중에 각 5억 원씩 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 명의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사업의 주체는 조국보위후원회였으며, 재정상이 복권 전체의 판매와 당첨금 지불 등 조국보위후원회의 사업을 지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국가계획위원장은 복권 선전사업과 기타 이 사업에 필요한

90) 안영, “조국보위후원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로동신문』, 1953년 7월 15일, 2면.

지출을 제때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⁹¹⁾

「조국보위복권 발행에 관한 조례」 및 「조국보위복권 매급 및 추첨에 관한 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⁹²⁾ 우선 제1회 조국보위복권은 100원 권으로 7월 중에 총액 5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당첨금은 5만 원, 2만 원, 1만 원, 5천 원, 2천 원, 3백 원, 150원 등 7등급으로 구분되었고 총 77만 매가 당첨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판매 대금 중 30%가 당첨금과 기타 경비로 지출되고, 나머지 70%는 비행기·탱크·함선 헌납기금으로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었다. 복권의 판매처는 조선중앙은행을 비롯한 농업은행, 야전은행, 저금관리국 등 금융기관과 국영상점, 소비조합 상점 등에 비치되는 임시 복권매급소, 기타 가두로 정해졌다. 북한은 조국보위복권 판매에 있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자원적 원칙에 의하여 공화국 내의 전체 주민들에게 매급”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미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보위복권을 발행한 이유는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군비 확충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력과 조선인민군은 애초에 약 한 달 이상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지만,⁹³⁾ 전쟁은 1년이 넘게 이어져오고 있었다. 게다가 미군의 폭격으로 생산기반은 파괴되었고 완벽한 복구에는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릴지 알 수 없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으로, 전쟁 이전과 마찬가지로 민간사회에 기대 군사비를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조국보위복권의 발행을 추진한 것이다.

9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297호 : 조국보위복권 발행에 관하여”, 『로동신문』, 1951년 6월 19일, 1면.

92) “조국보위복권 발행에 관한 조례와 매급 및 추첨에 관한 규정 개요”, 『로동신문』, 1951년 6월 19일, 1면.

93) 조수룡,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전시생산과 중·소의 지원」, 『군사』 8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93쪽.

조국보위복권 발행이 공식화된 이후부터 전 사회에서 복권 구매자금 마련 ‘열풍’이 불었다. 『로동신문』은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라는 쪽지를 만들고, 거의 매일 어떤 인물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지 소개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증산경쟁, 저축, 시간 외 노동, 폐품 수거, 절약, 부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비축하며 복권 발매를 기다리고 있었다.⁹⁴⁾ 예를 들어 농민들은 농작물 단위당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비료관리에 노력을 다하는 한편 가축을 증식하여 복권 구매자금을 마련했다.⁹⁵⁾ 한 달 월급 모두를 복권 구입에 사용하기 위해 저축해 두었다는 간호장교의 이야기는 미담으로 소개되었고,⁹⁶⁾ 각 지역과 직장에서는 복권 구매를 결의하는 쉼기대회와 좌담회가 열렸다.⁹⁷⁾

그런데 7월부터 발행되어 8월 중에 추첨을 실시하겠다고던 제1회 조국보위복권 5억 원어치는 발매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는 그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는 10월 4일자로 복권 판매 개시를 알리는 결정서를 발표하고 다음날인 5일부터 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렸다.⁹⁸⁾

94)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7월 17일, 1면;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8월 4일, 1면;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8월 9일, 1면;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9월 7일, 3면;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9월 24일, 3면.

95)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8월 17일, 1면.

96)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8월 5일, 1면.

97)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7월 18일, 1면;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7월 17일, 1면;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8월 6일, 1면.

98) 10월 4일 저녁 8시 30분이 정령이 방송 연설을 통해 조국보위복권 판매를 알린 것이 시작이었다. “조국보위복권 매급을 인민들 열렬히 지지 환영”, 『로동

원래 계획대로라면 제2회 복권이 발매되었어야 했지만 그제야 첫 번째 복권의 판매가 시작된 것이다. 10월 5일부터 발행될 복권은 총액 5억 원이었고 이 복권의 추첨은 11월 25일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최초에 예정되어 있던 판매처에서 각 금융기관과 임시복권매점소는 빠지고 조선인민군 및 경비대 각 부대가 추가되었다.⁹⁹⁾

복권 발매에 맞추어 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정령은 「조국보위복권 매급에 제하여」라는 글을 발표하였다.¹⁰⁰⁾ 이 글은 조국보위복권 발행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전 주민이 복권 구매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정령은 조국보위복권이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재정 수탈을 위해 남발하는 복권”이나 침략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거둬들인 식민지기 ‘국방헌금’과 달리, “정의로운 목적에 사용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당시 남한에서 발행하고 있던 ‘국채’, ‘채권’도 거론하면서, 이는 “미 제국주의 주구인 리승만 괴뢰도당”이 자신들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하고자 “남발”하는 “테러적 약탈”이자 “강제적 수탈”이라고 평가절하 하였다.

정령은 또 조국보위복권이 구매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5만 원 50매, 2만 원 100매, 1만 원 250매, 5천 원 1,000매, 2천 원 25,000매, 3백 원 49,950매, 150원 540,000매로 총 당첨금이 99,485,000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국보위복권 보급사업의 승리는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군사적·조직적 단결력을 또 한 번 세계에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신문], 1951년 10월 5일, 3면.

99) “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 결정서 : 조국보위복권 매급에 관하여”, 『로동신문』, 1951년 10월 5일, 1면.

100) “조국보위복권 매급에 제하여”, 『로동신문』, 1951년 10월 1일, 1면.

이후 북한 사회는 초기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과 복권 구매자금 마련운동 때보다 한층 더한 복권 구매 열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 공장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공장 민주선전실에 모여, 10월 4일 저녁 8시 30분 조국보위복권 판매를 알리는 방송을 함께 청취한 후 복권 구매를 결의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¹⁰¹⁾ 북한 전역에서 개최된 조국보위복권 구매 궐기대회에서는 복권 발행을 지지하는 연설과 토론이 이어진 후, 곧바로 참석자들에게 복권을 판매하였다.¹⁰²⁾ 복권 구매를 홍보하기 위해 매일 인민반별 좌담회가 열렸으며, 녀맹 소속 선동원들은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조국보위복권의 의의를 해설·선전하였다.¹⁰³⁾ 『로동신문』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조국보위복권을 대량·거액으로 구매한 사례를 매일 중계하다시피 했음은 물론이다.

그림 1 조국보위복권 실물(NARA, RG 242, 09/1953-01/1958, Item 29)



조국보위복권은 발행 10일 만인 1951년 10월 15일 목표액 5억 원을 1억 원이나 초과하여 6억 원어치가 판매되었다. 평안

101) “안기옥 지메인 지도 하의 공장 로동자대회에서”, 『로동신문』, 1951년 10월 5일, 3면.

102) “원수 격멸을 위하여 : 제6인민시장 상인들”, 『로동신문』, 1951년 10월 8일, 3면.

103) “미제 침략자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 기림리 인민들 복권 구매에 열성”, 『로동신문』, 1951년 10월 8일, 3면.

북도에서는 10월 5일 오전 8시부터 도내 각지에서 복권이 일제히 판매되기 시작한 지 불과 10시간 만에 도에 배정된 1억 3천 4백만 원의 복권 전부가 팔려나갔고,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에서도 판매 다음날인 6일에 모든 복권이 판매되었다. 북한은 “공화국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을 불가분리의 것으로 확신”하는 주민들의 애국심이 목표 초과 달성의 이유라고 선전했지만,¹⁰⁴⁾ 집중적인 홍보와 각종 쉼기대회 등의 동원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임이 분명하다. 조국보위후원회는 10월 15일부로 조국보위복권 판매의 성공적인 완료를 선언하였다.¹⁰⁵⁾

그림 2 직장에서 복권을 구매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로동신문』, 1951년 10월 8일, 3면)



복권 판매가 끝난 후 조국보위후원회는 ‘조국보위복권 추첨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첨 준비작업에 돌입하였

104) “조국보위복권 구매사업에서 나타난 우리 인민의 애국열성”, 『로동신문』, 1951년 10월 19일, 1면.

105) “인민들의 고상한 조국애로써 복권 매급 승리적으로 완료 : 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정립 동지 담화”, 『로동신문』, 1951년 10월 19일, 2면.

다. 추첨위원회는 위원장 김영수(녀맹 부위원장), 부위원장 허인흡(조국보위후원회 부위원장)·현철중(농맹 부위원장), 서기장 신호성(재정성 공채부장)과 위원 7명으로 구성되었다.¹⁰⁶⁾ 추첨은 판매 개시 당시 발표했던 대로 11월 25일 평양에서 공개추첨으로 진행하고, 당첨번호는 신문과 라디오 등 각종 보도기관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당첨금은 추첨 결과 발표 직후부터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농민은행 각 지점 및 각 야전은행에서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1등과 2등의 당첨금은 조선중앙은행 중앙지점과 야전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¹⁰⁷⁾

11월 25일 공개된 추첨장에는 세 대의 추첨기와 당첨번호 게시판이 준비되었다. 추첨위원회는 각급 정권기관 대표들을 비롯하여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군무자, 상인, 기업가, 시민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추첨을 실시하였다. 추첨에 앞서 추첨위원회 위원장 김영수가 조국보위복권 사업의 경과와 의의를 설명하였다. 번호를 뽑은 것은 6명의 어린이들이었다. 당첨번호는 즉석에서 발표되어 게시판에 기록되었다. 이날 78차례에 걸친 추첨이 완료되었고, 당첨된 것은 5만 원 1매, 2만 원 2매, 1만 원 5매, 5천원 20매, 2천 원 50매였다.¹⁰⁸⁾

106) “제1회 조국보위복권 추첨위원회 구성”, 『로동신문』, 1951년 11월 25일, 1면. 위원은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북조선중앙은행 부이사장, 노동자, 농민, 기업가, 상인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107) “11월 25일에 제1회 조국보위복권 추첨”, 『로동신문』, 1951년 11월 23일, 1면.

108) “제1회 조국보위복권 추첨 진행”, 『로동신문』, 1951년 11월 26일, 3면.

그림 3 제1회 조국보위복권 추첨 장면(『로동신문』, 1951년 11월 26일, 3면)



추첨은 12월 16일에도 계속될 예정이고 총괄적인 당첨금액과 번호는 추첨이 끝나는 날 발표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로동신문』에서는 이 이후의 추첨 경과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60명의 1등 당첨자 중 첫 번째로 조선중앙은행 중앙지점에 당첨금을 찾으러 온 농민 립관오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¹⁰⁹⁾ 평안남도 룡강군 지운면에 거주하는 립관오는 구매한 12매의 복권 중 한 장이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 5만 원을 수령하였다. 당첨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는 당첨금으로 축우를 사서 “전방에 있는 우리 인민군대에 더 많은 식량을 보내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조국보위복권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109) “조국보위복권 복금으로 축우를 사겠다 : 1등 당첨자 룡강군 립관오 농민”, 『로동신문』, 1951년 12월 26일, 3면.

조국보위후원회는 이 사업을 성공시킴으로써, 모든 사회단체가 동원체제에 결합하여 전쟁 전 자신의 고유 임무를 나눠야 했던 한국전쟁기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리고 후방의 북한 주민들은 조국보위후원회에서 주도한 조국보위복권 사업으로 전쟁 승리를 염원하는 자신의 애국심을 복권 구메라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증명하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4. 맺음말

조국보위후원회는 조선인민군 원호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49년 7월 15일 설립되었다. 조국보위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1949년부터 시작된 군사적 성격의 38선 충돌 및 북한의 전쟁 준비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북한이 한국전쟁에 대비하면서 추구했던 것은 전 사회의 군사화였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대중을 포괄하는 전 사회적 대중동원단체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북한의 선전과 달리 지방 단위에서의 조국보위후원회 조직은 순조롭지 않았지만, 조국보위후원회는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과 군사지식의 보급에 앞장서는 등 전쟁에 대비하였다. 조국보위후원회가 최일선에 서서 구축해놓은 동원체제 덕분에 북한은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전시동원체제로 급속히 전환할 수 있었다.

개전 이후에도 조국보위후원회는 전쟁 수요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면서 북한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조국보위후원회는 군대에 대한 원조를 주요 활동으로 했던 전쟁 이전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확장하고 위생사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도 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 이전 비행기·탱크·함

선기금 헌납운동을 주관했던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군비 확충을 위한 조국보위복권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여 자신의 애국심을 증명하는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되었다.

조국보위후원회는 정전 이후에도 조선인민군 후방가족과 한국전쟁에서 희생당한 ‘애국열사’ 가족 및 ‘영예군인’·제대군인에 대한 원호사업을 전개하였다.¹¹⁰⁾ 원호의 대상만 전후 상황에 맞게 달라졌을 뿐, 활동 내용은 이전에 조국보위후원회가 맡았던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조국보위후원회는 정전 후 약 6년 가까이 존속하다가 1959년 1월 ‘로농적위대’가 창건되면서 해체되었다.¹¹¹⁾ ‘로농적위대’는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된 이후 북한 지도부가 추진한 4대 군사노선 중 ‘전 인민의 무장화’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¹¹²⁾ 조국보위후원회의 탄생이 군사주의 확산을 알리는 계기였다면, ‘로동적위대’ 창설은 군대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또 한 번 강해졌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전체하고 보면, 조국보위후원회라는 단체의 결성과 해체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조국보위후원회의 결성 배경과 과정,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한국전쟁 발발 이후 확대된 역할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국보위후원회의 실체가 어느 정도 해명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보위후원회의 조직체계를 밝히지 못했고, 단체의 자발성과 사회적 수용과정도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으로 모금된 금액이 실제에 부합하는지

110) “애국열사 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및 영예군인들에 대한 전 인민적 원호를 강화할 대책 토의 : 조국보위후원회 개성시위원회 전원회의”, 『로동신문』, 1958년 1월 3일, 3면.

111) 『조선대백과사전』.

112) 서동만, 앞의 책, 825쪽.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도 더 논구되어야 할 문제다. 이상의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발굴이 필수적이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원고투고일 : 2018. 10. 9, 심사수정일 : 2018. 11. 17, 게재확정일 : 2018. 11. 19)

주제어 : 조국보위후원회, 군대원호, 군사지식, 한국전쟁, 조국보위복권, 전시 체제, 동원

〈참 고 문 헌〉

1차 사료·자료집 및 북한 문헌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4·15·18·39·53권

김일성, 「비행기사양군조를 조직할 데 대하여」(1950.12.29), 『김일성 저작집』 6,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로동신문』

리석청, 「조국보위후원사업을 위하여」(1950.1.18), NARA, RG242, SA 2012,

Box 1143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24,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조국보위복권(백원)」, NARA, RG 242, 09/1953-01/1958, Item 299

「조국보위를 위한 조선중앙통신사 종업원 쫓기대회 보고서」(1949.11.3), 통일부 북

한자료센터 소장 마이크로필름 자료

「조국보위를 위한 조선중앙통신사 종업원 쫓기대회 회의록」(날짜 미상), 통일부 북

한자료센터 소장 마이크로필름 자료

「조국보위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초급단체 회의록」(1949.10.5), 통일부 북한자료

센터 소장 마이크로필름 자료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조국보위를 위하여』 창간호(1949.10)·1950년 신년호

(1950.1)·제2권 5호(1950.5)·1951년 4월호

『조선대백과사전』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1~1952』,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52

최옥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시기 조국보위후

원회의 결성과 그 활동」, 『력사과학』 216,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기광서 외,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 선인, 2014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I : 건당·건국·건군의 역사』, 선인, 2003

김남식, 『남로당 연구 I』, 돌베개, 1984

- 김두섭 외, 『북한의 인구와 인구 센서스』, 통계청, 2011
- 김태우, 『폭격 :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 기원과 원인』, 나남출판, 1996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 1945~1961』, 선인, 2005
- 서중석 외, 『전장과 사람들 :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일상』, 선인, 2010
-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 정일영, 『북한의 사회통제체제 형성, 1945~1961 : 규범·동의·재사회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한성훈, 『전쟁과 인민 :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돌베개, 2012
- 황성철, 『北韓軍의 韓國戰爭遂行 戰略에 關한 研究 : 클라우제비츠의 摩擦理論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연구논문

- 강혜경, 「한국전쟁기 후방 치안유지와 경찰」, 『인문과학연구』 30, 성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http://uci.or.kr/G704-SER000014263.2012.30..012>
- 강혜경, 「한국전쟁기 서울 경찰과 후방치안」, 『인문과학연구논총』 35,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http://uci.or.kr/G704-SER000013482.2013.34.1.014>
- 김광수, 「북한정권 성립 이후 ‘통일’ 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1948년 9월부터 1950년 1월까지를 중심으로-」, 『군사』 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https://doi.org/10.29212/mh.2011..79.1>
- 김용현, 「로동신문 분석을 통한 북한정치 변화 연구 : 1945~1950」, 『북한연구학회보』 7-1, 북한연구학회보, 2003,
<http://uci.or.kr/G704-001326.2003.7.1.011>
- 김재웅, 「북한의 38선 접경지역 정책과 접경사회의 형성 -1948~1949년 강원도 인제군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8, 고려사학회, 2007,
<http://uci.or.kr/G704-000690.2007..28.008>

- 김재웅, 「한 공산주의자의 기록을 통해 본 한국전쟁 발발 전후의 북한」, 『한국사연구』 141, 한국사연구회, 2008,
<http://uci.or.kr/G704-000361.2008..141.005>
- 김재웅, 「38선 분쟁과 접경지역 위기에 대처한 북한의 민간인 동원정책」, 『한국학논총』 4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http://uci.or.kr/G704-SER000013600.2016.45..003>
- 김재웅, 「북한의 민간자원 동원정책과 일상적 동원체제의 형성(1945~1953)」, 『한국사연구』 175, 한국사연구회, 2016,
<http://uci.or.kr/G704-000361.2016..175.007>
- 김태우,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 『한국사학사학보』 32, 한국사학사학회, 2015, <http://uci.or.kr/G704-001549.2015..32.007>
- 문미라, 「한국전쟁 시기 중국인민지원군·연변(延邊) 조선인 사회의 ‘후방지원’ 활동과 북중 ‘혈맹’ 관계의 강화」, 『동북아역사논총』 57, 동북아역사재단, 2017
- 박영자, 「6·25전쟁기 북한의 ‘후방’정책 -후방 전사동원에 대한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5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http://uci.or.kr/G704-001528.2005..57호.010>
- 박영자, 「6·25전쟁과 북한여성의 노동세계 : 파괴와 재생산의 전쟁에서 ‘창조와 생산의 주체’였던 여성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5-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6,
<http://uci.or.kr/G704-001071.2006.45.2.005>
- 안태윤, 「북한여성들이 겪은 한국전쟁 -전쟁동원활동과 체제하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20, 한국여성사학회, 2014,
<http://doi.org/10.22511/women..20.201406.178>
- 안태윤, 「전후 북한여성의 삶과 탈북의 전략적 선택」, 『여성과 역사』 24, 한국여성사학회, 2016, <http://doi.org/10.22511/women..24.201606.187>
- 윤경섭, 「한국전쟁기 북한의 전시체제와 계엄」, 『인문과학』 62,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http://uci.or.kr/G704-001847.2016..62.004>
- 윤경섭, 「북한·소련의 전시체제 형성 과정 비교 연구 -초기 ‘전시상태’와 국가기관

개편을 중심으로-」, 『사림』 61, 수선사학회, 2017

조수룡,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전시생산과 중·소의 지원」, 『군사』 8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http://doi.org/10.29212/mh.2013..88.61>

조영주, 「북한 여성의 전쟁 경험과 인민되기」, 김귀옥 외,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 아르케, 2013

〈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Patriotic Supporter Association in North Korea

Moon, Mi-ra

Patriotic Supporter Association (PSA) was established on July 15, 1949, with the aim of supporting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The establishment of PSA is closely related to the 38-line military conflict that began in 1949 and to the war preparation strategy of North Korea. What North Korea sought in preparation for the Korean War was the militarization of the whole society, and consequently, the government needed a full-scale social mobilization group that encompasses a wide range of masses. Unlike the propaganda of North Korea, organizing PSA at a local level did not proceed very well. However, PSA prepared for war by taking the lead in raising funds for airplanes, tanks and ships and spreading military knowledge, including military training. Due to the mobilization system established at the forefront by PSA, North Korea was able to rapidly switch to the wartime mobilization system as soon as the war broke out.

Since the beginning of the war, PSA supported various wartime activities of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s for the war. In a meantime, PSA further advanced its pre-war tasks of the military supporting role toward direct military functions, and also entered into a new area of sanitation business. Moreover, PSA successfully completed the patriotic supporter lottery ticket project in order to raise funds to perform war, using its experiences in the pre-war fundraising campaigns for airplanes, tanks and ships. In

the process, the North Korean citizens settled into the new routine of lives to demonstrate their own patriotism to their country by buying lottery tickets.

Key words : Patriotic Supporter Association, military support, military knowledge, the Korean War, Patriotic Supporter lottery ticket, wartime system, mobilization

